기로에 선 북한경제: 2025년 평가 및 2026년 전망

이종규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jklee@kdi.re.kr

Ⅰ. 서론

최근 북한경제는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그리고 공식부문을 중심으로 관찰되는 회복 조짐은 북한경제의 추세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부문과 시기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이나 생산 지표를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경제의 구조와 정책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와 강력한 통제 국면을 지나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외부 관찰자들 사이에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국경 통제 완화, 산업 및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 회복 조짐, 일부 대외 교류 재개,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은 과거 봉쇄 국면과 분명히 구별되는 변화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북한경제 전반의 실질적인 개선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평가의 톤이 이렇게 미묘하게 갈리는 이유는 북한경제의 회복 양상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산과 국가예산 수입 등에서는 일정한 회복 조짐이 관찰되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가 비공식부문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득과 수요 측면에서의 낙수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의 환율과 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경제 전반의 체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만큼 최근의 회복 조짐이 정책 방향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외생적 환경

변화와 일시적 조건에 따른 결과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석은 북한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체제 내에서 단기적 조정 국면에 머물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최근 관찰되는 개선은 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고 있다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동원할 수 있는 영역만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가설이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원과 정책 역량이 집중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억눌려 있던 생산활동이 큰 폭으로 반등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현재 관찰되는 성과는 추세적 전환이라기보다는 기저 효과 또는 정책 집중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성과를 새로운 성장 경로의 초기 단계로 볼 여지도 있다. 북러 협력 확대는 북한경제가 기존의 북중 교역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새로운 공급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공식부문 중심의 회복은 비공식부문의 안정적인 제도화로 귀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북한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제재의 틀이 상당 부분 무력화된 것도 큰 변화이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단순한 기저 효과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개선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최근 북한경제의 회복 조짐을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북한경제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개선 여부를 묻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개선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식부문 회복이 시장과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국가 주도적 동원이 약화될 경우 다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경제의 작년 상황과 5개년 계획 동안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개년 계획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산업, 농업, 국가예산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다. 이어서 2025년 북한경제가 갖는 고유한 성격을 정리하고, 2026년 북한경제를 좌우하게 될 주요 결정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과 선택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Ⅱ. 최근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

2025년은 북한경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5개년 계획(2021~25년)을 마무리하는 해였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의 성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1~22년 동안의 국경봉쇄 여파가 지나간 후 2023~24년 동안 산업과 농업 부문에서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국가예산 실적은 재정 여건의 개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어쩌면 이러한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2025년은 단순한 연차 평가를 넘어 이들에 대한 '종합 결산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5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5년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5개년 전략 vs. 5개년 계획: 성과에 대한 체감의 차이

과거의 5개년 전략(2016~20년)은 제재의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가 중첩되면서 복합적 외부 충격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당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북한 당국은 해당 전략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전략의 실패 요인으로는 "현실 여건과 괴리된 과도한 목표의 설정, 만성적인 투자 재원의 부족, 그에 따른 과학기술 부문의 역할 제약, 그리고 경제관리체계 전반의 비효율성 만연"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홍제환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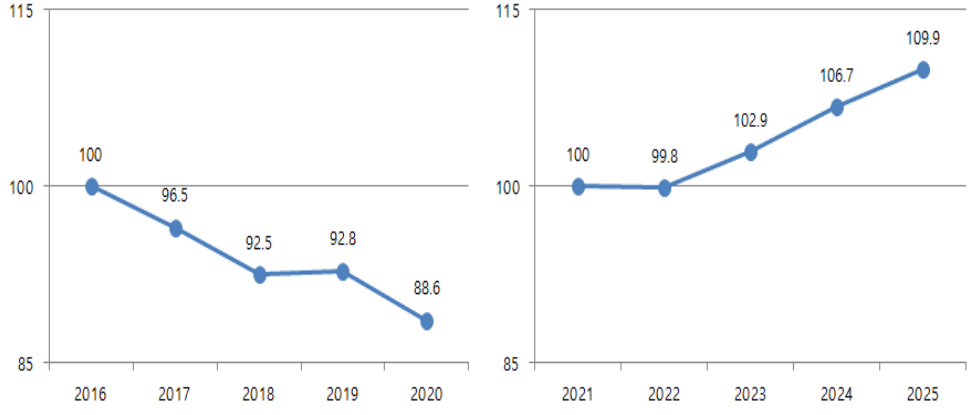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이후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이전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된 5개년 계획은 성장보다 체제 안정과 기존 산업의 정비·보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전략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5개년 전략과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5개년 계획은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목표를 지향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든 이번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가 있었으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으며, 산업(특히 중화학) 및 농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간 성장률을 토대로 5개년 전략과 5개년 계획의 전후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 시기의 성과는 수치상 차이뿐만 아니라 체감되는 경제 상황에서도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우선 5개년 전략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6년의 경제 수준을 100으로 설정할 때, 종료되는 2020년에는 해당 지수가 88.6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 기간 경제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 시행 이전보다도 경제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산업생산과 소득 여건 전반에서 개선의 흐름을 체감하기 어려웠고, 정책적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상치 않던 코로나19까지 경험하면서 국경을 봉쇄해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5개년 계획(2021~25년)의 종착점은 5개년 전략과는 완전히 대비된다. 2021년의 경제 수준을 100으로 두고, 2025년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25년의 경제 수준은 약 109.9에 이르게 된다.[1] 이는 누적 기준으로 약 10% 수준의 실질적인 경제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최소한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5개년 전략과 달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경제적인 성과가 출발 시점 대비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체감되는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1] 경제 수준 비교: 5개년 전략(2016~20년) vs. 5개년 계획(2021~25년)



주: 1) 5개년 전략 및 5개년 계획 시작 연도(2016년 및 2021년)의 경제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종료 시점 수준.
2)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3% 내외로 가정하고 추정.
자료: Ecos를 토대로 저자 작성(https://ecos.bok.or.kr/, 검색일: 2026. 1. 17).

1) 2025년의 성장률을 조금 보수적으로 2%로 가정한다면 경제 수준은 2021년 대비 108.8로 추정되며, 2024년(3.7%)보다 높은 4%의 성장률을 가정한다면 111.0에 이르게 된다. 즉, 108.8~111.0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경우이건 2021년 대비 경제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5개년 전략 시기에는 경제적 축소가 누적되면서 어려움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5개년 계획의 시기에는 동일한 제재 환경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후퇴 국면을 벗어나 일정한 회복 흐름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표 개선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관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정치적·선전적 공간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처럼 5개년 전략과 5개년 계획의 성과 차이는 숫자의 크기보다도 정책의 기간을 관통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체감의 방향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감의 차이는 이후 북한경제에 대한 내부 평가와 정책 선택, 나아가 대외적 메시지 설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발표될 새로운 계획은 5개년 계획에서 나타났던 수세적 기조를 넘어 보다 과감하고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하면서 당국의 자신감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2023년 이후 본격화된 산업·농업 부문에서의 회복세

이러한 개선 흐름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산업 및 농업 부문에서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데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요 공업과 농업 생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 지표의 회복은 제한적이지만 경제 전반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사실 2021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은 출범 직후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외 교류와 물자 이동이 차단된 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계획의 초기 이행은 지연되었고, 주요 생산 목표 역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계획의 집행보다는 방역과 체제 안정 유지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5개년 계획은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 8월 북한이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방역 국면이 종식되면서 북한은 지연되었던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미 직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현행 5개년 계획마저 성과 없이 종료될 경우 정책의 신뢰도와 체제 전반에 미칠 부담이 크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2023년부터 북한 당국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알곡, 전력, 석탄 등 '12개 중요고지'의 달성이었다. 12개 중요고지는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추상적 목표라기보다는 단기간 내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선별하여 자원과 동원을 집중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기저 효과와 맞물리면서 2023년과 2024년의 실적 지표에 큰 폭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국경봉쇄 기간 중의 생산 수준과 비교한 성과들이 측정되면서 일부 핵심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높은 성장이 관측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회복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책 동원이 집중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중요고지를 중심으로 채택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5개년 계획의 이행 동력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2023년 초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12개 중요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후 연말에 각 부문의 수행률을 공개하였다. 나아가 2024년에는 일부 핵심 부문에 대해 전년 대비 증가폭을 수치로 제시하며 성과를 부각시켰다. 공개된 6개 부문의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압연강재는 2023년 목표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색금속은 40%, 석탄은 15%, 천은 9% 수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2] 이러한 수치는 12개 중요고지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표 1〉 12개 중요고지: 수행률, 증가율, 실적치(2023년 목표 대비)

(단위: %)

	수행률		증가율	2023년 목표치 = 100	
	2023년	2024년	2024년	2024년 목표치	2024년 실적치
(1) 알곡	103	107	-	-	-
(2) 전력	100	101	-	-	-
(3) 석탄	100	110	15	105	115
(4) 압연강재	102	127	43	115	146
(5) 유색금속	131	106	7	132	140
(6) 질소비료	100	103	4	101	104
(7) 시멘트	101	101	2	102	103
(8) 통나무	109	104	-	-	-
(9) 천	101	101	8	108	109
(10) 수산물	105	101	-	-	-
(11) 살림집	109	목표 달성	-	-	-
(12) 철도화물수송	106	108	-	-	-

주: 1) 2024년 목표치와 실적치는 2023년의 목표가 100일 때 2024년에 달성한 실적.
2) 수행률과 증가율은 북한 매체의 발표이며, 2024년 목표치와 실적치는 이를 토대로 계산.
자료: 북한 매체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2) 나머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목표치 대비 수치는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압연강재는 주로 건설업, 발전설비, 공장설비, 국방군수 관련 구조재 등으로 쓰일 수 있는데, 2024년 압연강재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3]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는 압연강재 생산에 관한 소식이 자주 보도되었으며,[4]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경우 주체철 생산 체계 확립 이후 압연강재 생산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다.[5]

유색금속은 보통,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크롬 등 비철금속을 지칭하는데, 2023년 목표치 대비 2024년 생산이 크게 증가한 부문이었다(40%). 유색금속은 잘 녹슬지 않고, 전기·열 전도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선, 케이블, 발전기, 철강 도금,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핵심 중간재로 활용된다. 따라서 유색금속 생산 증가는 주로 건설, 전력, 기계, 군수 산업 등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된 부문에 집중적으로 자원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는 관련 생산 단위에 대한 보도가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특히 전기아연과 황산을 생산하는 단천제련소의 경우 북한이 선정한 10대 최우수기업[6]에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기아연과 황산의 생산이 동시에 활발했다는 점은, 북한이 5개년 계획에서 공언한 금속 및 화학 부문에 대한 우선 육성 기조의 영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표 2〉 북한이 선정한 10大 최우수기업

	2022년 10대 기업	2023년 10대 기업	2024년 10대 기업
1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2	안주뽐쁘공장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삼청광산**
3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평양326전선종합공장
4	**단천제련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단천제련소**
5	청진동물원사료보장수산사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나선혜성종합개발사업소**
6	신양군영예군긴고려약공장	순천화력발전소	강서분무기공장
7	삼흥경제정보기술사	**단천제련소**	평양양말공장
8	나래도자기공장	신의주화학품공장	평성가방공장
9	천리마타일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회천제사공장
10	대동강맥주공장	**나선혜성종합개발사업소**	단천지구광업총국 룡천광산

주: 2회 이상 선정된 기업은 굵은 글씨로 표시.
자료: 북한 매체의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2024년 한국은행의 성장률 추정 결과도 건설업이 12.3%, 중화학공업이 10.7%로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노동신문』(2024. 9. 19).
5) 『노동신문』(2025. 10. 5).
6) 북한은 2023년부터 10대 최우수기업을 공개하고 있다. 기업체 선정은 도인민위원회에서 우수한 기업체로 추천된 40여 개의 단위 중 생산량, 공업총생산액, 종업원 1인당 생산액, 평균 노동보수, 초과 수행한 계획, 제품의 질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노동신문』, 2023. 10. 2).

한편, 농업생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공식 회의와 공개 발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린 부문 중 하나이다. 일례로, 2023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알곡 생산 목표를 초과한 점을 올해 경제사업 성과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특정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7] 실제로 봉쇄 후 2023~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호한 생산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 당국은 종자혁명, 두벌농사, 과학농사, 기계농사 확립, 벼와 밀농사 적극 추진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나, 2~3년 동안의 유리한 기상 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8]

앞서 살펴본 5개년 전략과 5개년 계획의 전후 상황을 비교해 보면, 농업생산 측면에서도 '체감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5개년 전략이 시작된 2016년의 곡물 생산량은 약 481만톤이었으나, 전략 종료 시점인 2020년에는 440만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5개년 계획의 경우 2021년 약 469만톤 수준에서 시작해 종료 시점인 2025년에는 약 490만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 동안 곡물 생산의 평균치인 468만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5개년 전략 기간에는 농업생산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체감될 수 있는 반면, 5개년 계획은 생산 회복이 진행된 것으로 인식될 여지를 제공했을 것이다.

〈표 3〉 곡물 생산량 비교: 5개년 전략 vs. 5개년 계획

(단위: 만톤)

	쌀	옥수수	감자/고구마	밀/보리	콩/기타 잡곡	총합
2016	222	170	55	17	17	481
2017	219	167	53	15	17	471
2018	220	150	54	15	16	455
2019	224	152	57	15	16	464
2020	202	151	54	16	17	440
2021	216	159	57	16	21	469
2022	207	157	49	18	20	451
2023	211	170	58	22	21	482
2024	215	161	54	28	20	478
2025	225	152	55	36	22	490

자료: 농업진흥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자체의 열의와 자신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기쁨넘친 결산분배모임이 전국의 농장들에서 련이어 진행된것은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2023년도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쟁취한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노동신문』, 2023. 12. 31).

8) "올해 북한 지역 기온이 4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해 겨울 작물의 유효분얼 확보에 유리했고, 8~9월 기온은 다소 높았으나 일사량이 많아 벼 등숙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 2025.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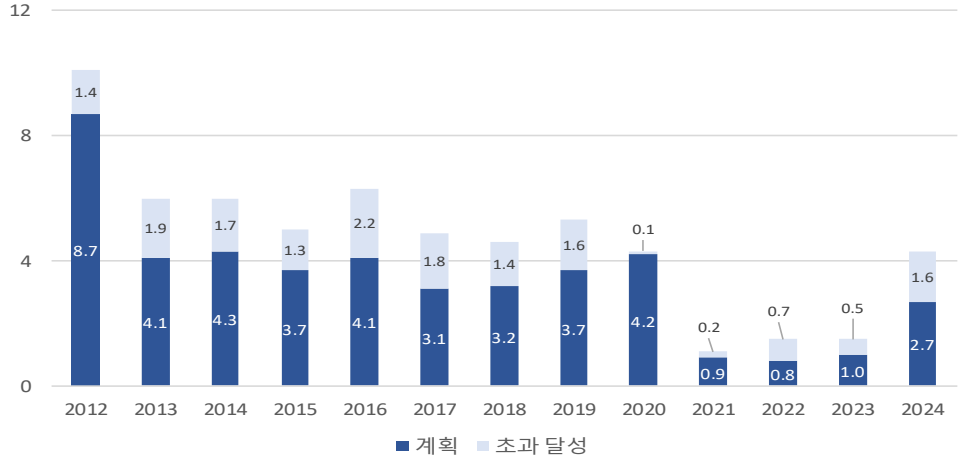
3. 국가예산을 통해 본 회복세, 특히 2024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국가예산 수입 추이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 변화와 일관성을 보였다. 국경봉쇄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던 시기에는 국가예산 수입 역시 급격히 감소한 반면, 경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 예산 수입도 이에 연동되어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실적 기준으로 보면, 봉쇄 이전인 2012~19년 동안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약 6.0% 수준이었던 반면, 국경봉쇄가 본격화되었던 2021~23년에는 연평균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예산과 경기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계획과 실적치 간의 괴리이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시기에는 수입 실적이 계획치를 상회하여 격차가 1.3~2.2%p 수준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경기 상황이 부진한 국면에서는 계획 대비 실적의 초과폭이 1%p 미만에 그치며, 계획치와 실적치 간의 차이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4년 들어 국가예산 수입 실적이 계획치를 1.6%p 상회한 점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이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라기보다는 국가예산 수입 확보에 대한 여건이 다시 예년과 비슷한 국면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2024년을 기점으로 재정 운용 환경이 점진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국가예산 수입 추이: 계획치와 실적치의 차이

(단위: %)



주: 초과 달성 = 실적치 - 계획치.
자료: 노동신문 발표를 토대로 저자 작성.

흥미로운 점은 북한 당국이 2024년 국가예산 수입 실적이 계획을 1.6%p 상회했다고 하면서도 2025년 예산 수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도 계획치보다 낮은 2.0%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아직 2025년의 최종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인 판단은 이르지만, 이러한 계획 조정만을 근거로 국경봉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온 국가예산 여건이 다시 악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24년에 이미 계획 대비 유의미한 초과 실적을 달성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2025년을 앞두고 예산 수입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끝으로 5개년 계획 동안 국가예산 수입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항목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은 예년과 유사한 4.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19년 동안 수입 항목에서 제외되었던 감가상각금을 다시 도입하는 등 가용한 재원 항목을 복원·확대함으로써 수입 목표를 가까스로 맞춘 결과로 해석된다. 이후 2021년부터는 '집금수입'이라는 수입 항목도 본격적으로 도입·확대하면서 재정 수입 수준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간 동안 재정 운용 방식의 조정을 통해 국가예산 수입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는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식부문 강화 기조와도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표 4〉 항목별 예산수입 계획(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

	2012~16	2017~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입 증가율	5.0	3.3	4.2	0.9	0.8	1.0	2.7	2.0
거래수입금	4.3	3.0	1.1	0.8	0.6	0.3	0.5	0.6
국가기업이득금	6.7	3.8	1.2	1.1	0.9	1.2	3.2	2.5
협동단체이득금	4.0	1.2	0.4	0.4	0.4	0.0	0.2	0.0
부동산사용료	3.9	1.4	0.1	0.0	0.3	0.0	2.0	0.0
사회보험료	2.7	0.9	0.0	0.3	0.2	1.0	2.0	1.0
재산판매/가격편차수입금	2.1	0.5	0.3	0.1	0.0	0.1	0.3	0.1
기타수입	1.3	0.8	0.2	0.6	0.2	0.0	0.1	0.0
특수지대수입금	4.3	1.8	0.3	0.2	0.0	0.3	0.6	0.3
감가상각금	2.6	-	추가	0.1	0.0	0.7	1.5	0.7
집금수입	-	-	-	추가	6.8배	0.2	0.4	0.2

자료: 이종규(2022)를 토대로 업데이트.

4. 2025년 북한경제의 특이성

그렇다면 2023~24년에 걸쳐 회복세를 보였던 북한경제는 2025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을까? 2025년은 2021~22년의 심각한 침체 국면과 2023~24년에 나타난 회복 국면 중 어느 쪽의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제9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2025년 경제 상황에 대한 보도를 예년보다도 더 제한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성과를 개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최근 전원회의 결정문과 당과 내각의 공식 발언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톤을 종합해 보면, 2025년 경제적 성과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일정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안정', '확대', '성과의 공고화'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 전년 대비 후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2023~24년에 형성된 회복 흐름이 2025년에도 꺾이지 않았다는 간접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가 경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나 본격적인 성장 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2025년의 경제 상황을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 혹은 '회복세의 유지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제한된 수준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관찰 가능한 지표와 정책적 메시지를 종합해 본다면 2025년 북한경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정리된다.

첫째, 2025년 경제 운용에 있어 무리한 목표 설정이나 과도한 성과 추구가 관찰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 국가예산 수입이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예상외의 실적(4.3%)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수입 증가율은 전년도 계획치(2.7%)보다 낮은 2.0%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조는 산업 부문에서도 감지된다. 북한 당국은 2023~24년에는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공개하며 성과를 부각했으나, 2025년에는 해당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추가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산업 성과 측면에서도 과도한 목표 달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9] 목표가 일정 수준만큼 달성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차기 계획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활용했을

9) 이러한 해석과는 반대로, 2025년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부진하여 북한 당국이 발표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양문수(2025, p.24)의 경우 "12개 중요고지에 대한 언급이 6월 전원회의, 9월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전혀 없었다는 점은 성과 측면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2025년은 북한경제에 있어 '회복의 가속'보다는 '정비와 보강'에 방점이 찍힌 한 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5년을 전후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도 신양군, 랑림군, 대관군 등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고, 최근 강동군에서는 종합봉사소 준공식이 진행되는 등 외형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 식량, 상업·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공업 공장만으로는 주민들에게 체감 가능한 성과를 과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4년에는 지방 경공업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25년부터는 보건시설(병원), 과학교육 및 생활문화시설(종합봉사소), 양곡관리시설 등이 3대 필수 건설 대상으로 포함되었다.[10] 이처럼 지방발전 정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성과는 선전과 동원의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석기(2026)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지방 경공업 공장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2025년 경공업 부문의 성장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준공은 건물의 완공을 의미할 뿐 실제로 가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러 밀착은 2024년에 비해 더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황 증거들로 보아 대러 경제협력이 곡물(옥수수·밀)과 에너지(정제유) 수입, 광물 자원 수출, 건설 장비 임대, 기술 인력의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장되면서 양국의 무역 규모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러 밀착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공급을 매개로 한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2024년 중화학공업은 "1차 금속제품, 조립금속, 기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0.7% 성장했는데(한국은행, 2025), 이러한 추세는 철강, 유색금속, 기계설비 생산 등과 맞물려 2025년에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러 협력은 외화 획득과 물자 조달을 넘어 북한의 중화학공업에 직접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비공식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었기보다는 일부 공식부문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2025년 산업 전반으로 시야를 확장해 보면 북한 당국이 특정 부문과 성과를 선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특히 금속, 화학, 기계 부문을 차례로 부각시켰는데,

---

10) 이러한 방향 전환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2024년 12월)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
11) 『Voice of Korea』(2025. 12. 29).

이는 최근 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금속 부문에서는 제철·광산 기업소를 중심으로 공정 개선과 기술 도입을 통해 철강재 생산이 확대된 점을, 화학 부문에서는 공정 효율화와 국산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수입 대체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12] 한편, 기계 부문에서는 로봇과 무인운반대차 생산, 공장 현대화[13] 등이, 전력 부문에서는 일부 수력발전소 준공과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통한 발전량 확대가 강조되었다. 2025년 북한 주요 지역의 이산화질소 일평균 농도 시계열을 조사하면, 화력발전소와 제조업(공장 포함) 지역에서 다른 산업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의 이산화질소가 관측되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순천시멘트공장 등에서 고농도의 이산화질소가 관측되기도 했다. 그리고 야간조도 자료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산업시설, 항만, 교통 거점 등 주요 경제활동 지역과 국경 인접 도시 및 행정물류 중심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표면온도 시계열 분석 결과, 북한 전역에서 산업시설 및 발전소가 위치한 거점에서는 주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반복적으로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25년 분야별 각 기업의 성과

분야	기업	내용
금속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산소 순도 제고를 통한 공정 개선 및 철강재 생산 증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질 제고 기술공정 도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가열로 열효율 제고 및 불량 압연 생산 감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초대형 발파 작업을 통한 철정광 생산 증대
화학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내부 기술에 의한 멜라민수지 생산공정을 통해 자립 토대 마련
	청진화학섬유공장	다용도전기절연종이 생산공정을 통해 수입 수요 절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절전형 공정 도입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사업
기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정밀가공 설비 국산화 및 로봇·무인운반대차 생산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소재생산 공정에서의 열처리 자동/통합 조종 체계의 구축
	낙원기계종합기업소	유압기구의 질 제고를 통한 유압식굴착기 성능 개선
	함흥연결농기계공장	수직가공 중심반, 크랑크프레스, 무인운반차를 통한 영농 기계화 비중 제고
	만경대/구성 공장기계공장	정비보강 사업
전력	수력발전소	단천발전소, 우시3호 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
	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선봉화력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주로 함경남도, 평안남도에서 성과

자료: 『Voice of Korea』(2025. 12. 29) 등 북한 매체의 발표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2)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해 "수입이라는 말 자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13) 이러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2026년 1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목표가 지연되었다며 기계공업 담당인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해임했다(『연합뉴스』, 2026. 1. 22).

Ⅲ. 2026년 북한경제 향방의 중요 변수

2025년이 경제 회복세의 지속 여부를 점검하는 해였다면, 2026년은 향후 북한경제의 경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 체제가 지속될 것인지, 환율과 물가 불안이 공식부문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인지, 북중 간 경제 교류가 실질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5개년 계획 종료 이후 제시될 새로운 경제계획이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될지는 모두 올해 북한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들이다. 이 같은 요인들의 방향성은 제9차 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2026년 북한경제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한경제의 향방은 개별 변수의 단편적 움직임보다는 이들 요인이 어떤 조합과 방향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2026년 북한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경로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내각 · 국가유통망 중심의 경제관리, 지속될 것인가?

지난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정책 기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한동안 경제주체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허용하던 정책 방향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경제 강화 기조는 내각 중심의 경제운영 체제 확립과 국가유통망 강화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흐름으로 관찰된다.

첫째, 내각 책임 및 중심의 경제체제는 북한에서 새로운 담론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원칙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당이 경제 운영의 기본 노선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집행하는 주체는 내각이라는 역할 분담이 전제되어 왔다. 내각이 국가경제 전반을 조율 및 관리하는 '경제의 사령탑'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은 그동안에도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담론의 차원을 넘어 202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 운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북한 당국은 내각을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내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들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이 구실, 저 구실을 대면서 흥정하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어기는 현상"을 지적하거나 "오늘날 내각중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언제까지나 해결을 지체시켜도 무방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내각을 중심으로 한 규율과 질서의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14] 특히 내각의 지휘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 확보를 강조하는데, 모든 내각 단위는 종합지표,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관한 수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제도화하고 있으며, 내각 밖의 단위는 내각에서 부여한 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내각 중심 체제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이완과 분권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시장에 대한 중앙의 지도・관리 강화는 무역, 상업 유통망, 식량 유통 부문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영역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입법을 통해 국가의 개입 권한을 명확히 제도화했다. 2022년 1월 개정된 무역법의 경우 2020년 3월의 무역법에 비해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강화했는데, 중앙무역 지도기관 등록(제13조), 무역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강화(제40조), 수출입허가제 및 할당제 실시(제47~48조), 구체적 행위에 대한 처벌 명시(제68조)[15]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상업법이나 양정법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16] 특히 최근의 정책은 시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을 존속시키되 중앙정부가 그 운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양문수, 2025). 이러한 방향은 모두 '국가의 유통망 독점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6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까? 북한 매체에서는 2025년에도 내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도적・운영상의 결함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5개년 계획의 마무리 국면과 맞물려 차기 경제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2026년에도 내각 중심의 경제 운영과 중앙의 통제 강화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시장활동을 일률적으로 억제하는 접근보다는 시장 기능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공식부문의 영향력과 자원 동원 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장을 아예 부정하거나 없애기보다는 국가가 시장 운영과 성과에 직접 플레이어로서 참여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전략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14) 『노동신문』(2020. 1. 24).
15) 제68조에는 국가의 무역 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지표를 선정하여 수출입했을 경우, 계획이 없이 무역거래를 했을 경우, 국가외화의무납부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수출입허가제 및 할당제 실시와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한다고 명시되었다.
16) 국가정보원(2024).

2. 환율 급등 및 물가 불안, 시장으로 전이될 것인가?

앞서 2025년 북한경제를 분석하면서 생산 여건이 매우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 흐름과 달리 최근 북한경제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영역은 환율 급등 및 물가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는 무역 재개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 공급 제약, 기대 인플레이션 등으로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최지영(2024, pp.7~8)은 외화 유통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행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로 전자결제체계 도입 이후 나타난 주민들의 외화비축 수요 자극 가능성, 협동화폐거래소 강화에 따른 공급 부족의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이종규(2025)는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무역 재개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 → 외화 거래 통제 강화로 인한 공급 충격 →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확산과 투기적 수요 자극'이 단계적으로 작용한 과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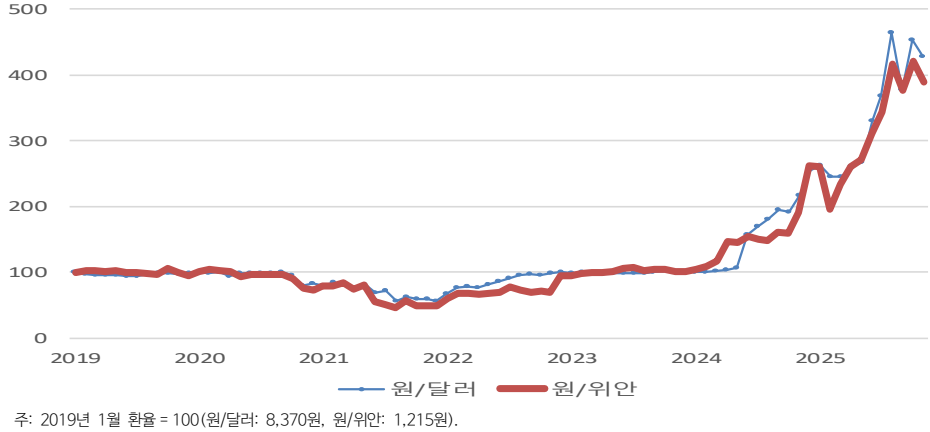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상승의 폭과 속도가 기존의 분석과 예측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원/달러 환율은 2024년 1월 8,375원에서 2025년 1월 21,900원으로 급등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37,7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Daily NK). 2025년 월평균 환율은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120% 이상 상승했다. 이는 2025년 환율 수준이 대체로 20,000~30,000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기존의 '뉴노멀'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즉, 단기적 수급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 요인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현상으로 2025년에 한층 강화된 원/달러 및 원/위안 환율의 동조화(coupling)를 들 수 있다. 남진욱(2026)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 간 상관계수는 0.87이었으나, 2025년에는 0.98까지 상승하며 두 환율이 거의 동일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화별 수급 요인보다는 공통적인 요인이 환율 변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5년에는 북중무역 확대에 따라 위안화 거래 수요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환율이 거의 동일한 궤적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은, 통화별 수요 변화가 환율 차별화로 반영되기보다는 원화 가치의 전반적인 약세와 외환시장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환율 변동이 단기적 수급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해석은 환율의 장기 흐름을 통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하자 위안화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위축되었고, 그 결과 북한경제에서 거래 통화로 활용되던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그리고 더 장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9년 1월을 100으로 설정할 경우 2021년 원화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했을 당시 달러 환율은 55.9까지 하락한 것이 최저치였던 반면(12월), 위안화 환율은 45.7까지 떨어지며(10월) 하락의 폭이 더 컸다. 이후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2023년부터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화보다 다소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24년 외환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가 주민들의 외화 수요를 자극하면서 달러 환율이 선행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외화 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원/위안 환율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2020~22년), 비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2024년). 이러한 움직임은 2025년에 들어 다시 동조화 흐름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2025년 환율 동조화 현상은 통화별 거래 구조의 변화보다 외환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환율 변동을 결정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17)]

[그림 3] 원/달러 vs. 원/위안 추이: 2019~25년



주: 2019년 1월 환율 = 100(원/달러: 8,370원, 원/위안: 1,215원).
자료: Daily NK.

17) 조금은 섣부른 결론일 수 있으나, 두 환율이 동조화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이 자체가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어 뉴노멀이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 북한 외환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상 상태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환율은 개별 외화의 상대적 수급보다는 원화 가치의 전반적 변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6년 두 환율의 흐름이 2025년과 같은 흐름을 지속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5년부터는 환율뿐 아니라 물가도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4년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남진욱(2026)에 따르면 쌀의 경우 2024년에 전년 대비 12.1% 상승했으나, 2025년에는 144.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273원 → 15,361원). 옥수수도 그 폭은 덜하지만 2024년 10.5%에서 2025년에는 45.1% 상승했다(3,085원 → 4,475원). 휘발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 19.3% 상승했으나, 2025년 91.0%까지 상승했으며(16,170원 → 30,881원), 경유도 2024년 22.5%에서 2025년 97.6% 상승했다(14,584원 → 28,820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18] 이는 2025년 들어 환율 급등이 바로 물가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계획화 강화를 위한 유일가격 조정, 국가양정체계 및 국영상업망 유지를 위한 생활비 인상, 통일적 외화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외화 통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19]

매우 의문스러운 것은 이러한 물가 불안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의 혼란한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당국이 가격 전달 경로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상업망을 통해 가격을 고정하거나 상한을 두고, 곡물, 연료, 비료 등 중요 품목은 행정적으로 분배한 것이다. 결국 당국의 강력한 행정적 개입과 통제 강화, 국경 개방 이후 공급 여건의 점진적 개선,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 위축으로 인한 수요 억제, 비공식 시장 참여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며 거래를 축소하는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이 곧바로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국가 개입과 수요 위축 속에서 '조용한 조정'의 형태로 흡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 당국이 이를 방치하고 관망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최근 확인되는 국정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시뇨리지(Seignorage)를 수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추가적 화폐 발행은 일정 수준까지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물가 상승이 이를 앞질러 실질 시뇨리지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구조적 안정 국면이라기보다 불균형이 표면화되는 시점을 지연시키는 '조정 국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른 부담 역시 점진적으로 정책 당국 내부에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2026년에 이러한 긴장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가 북한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8) 본 사례는 Daily NK 자료에 기반한 것인데, AsiaPress 역시 대체로 2025년 들어 물가 상승폭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폭은 Daily NK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통상 신흥국에서는 물가 불안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는 사례보다 자국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물가도 함께 뛰는 사례가 더 많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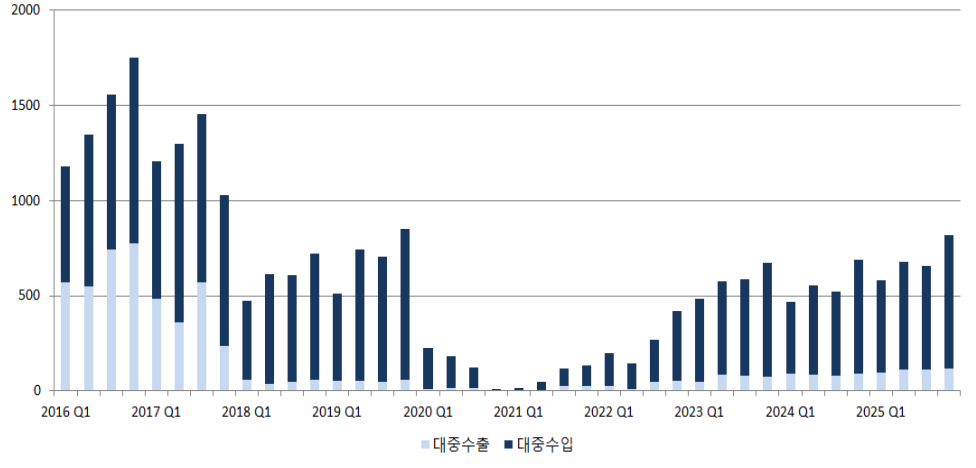
3. 북중무역, 더 확대될 것인가?

2025년 북중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2025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4.4억달러, 수입은 23.0억달러로 각각 20% 이상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체 북중무역 규모는 22.4% 늘어난 27.4억달러에 이르렀다. 이를 2019년의 북중무역 규모인 28억달러와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물량과 금액 기준 모두에서 북중무역이 봉쇄 이전의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유엔 제재 체제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면서도 제재 내에서 허용 가능한 교역을 최대한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의 북중무역 규모는 제재의 틀 안에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교역 수준의 '최대치에 근접한 균형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핵심 변수는 2026년 들어 대북제재의 실질적 구속력이 더 약화될지 여부이다. 지금과 같이 유엔 제재의 권위와 집행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중국이 제재의 암묵적 한계를 어디까지 허용하며 이를 사실상 완화된 형태로 운용하느냐는 2026년 북한경제의 외형적 회복 속도와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중국이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치'를 추구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지 여부가 2026년 북한경제의 경로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4] 분기별 북중 무역: 2016~25년

(단위: 백만달러)



자료: KITA(http://www.kita.net/, 검색일: 2026. 1. 23)를 토대로 저자 작성.

물론 북한 역시 대중 의존도가 과도하게 고착되는 것을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역·협력 채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규모와 구조라는 양적·질적 측면을 감안할 때 북중무역은 2026년 북한경제 회복세의 '기울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식부문의 회복세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괴리를 완화할 수 있는 핵심 경로는 여전히 북중무역이다. 실제로 제재 이전 시기 북중무역 규모가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에는 소비재, 산업 중간재 등이 거래되면서 비공식부문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제공했다. 그러나 2025년의 수출입 구조를 보면, 가발 및 인조 모발 제품 등의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임가공 형태의 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장호·최유정, 2026). 이는 제재로 인해 산업 고도화나 수출 구조 다변화가 제약되면서 임가공 무역에 의존해 최소한의 외화를 확보하고 생필품을 조달하는 교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석기(2026)는 2025년에 중간재로 활용될 수 있는 합성섬유, 식품가공용 원자재(대두유, 설탕, 글루탄산나트륨) 등의 대중 수입이 확대되고 2019년 수준까지 근접하면서 경공업 부문의 성장 여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26년에도 이러한 흐름의 지속 여부는 북중무역의 질적 측면과 북한경제에의 파급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표 6〉 경공업 중간재 품목의 대중 수입 추이

(단위: 만달러,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성섬유 (HS54+55)	24,574 (28.3)	2,746 (-88.8)	1,415 (-48.5)	6,752 (377.2)	12,839 (90.1)	15,823 (23.2)	16,521 (4.4)
대두유 (HS1507)	12,286 (-9.4)	6,584 (-46.4)	676 (-89.7)	4,913 (627.2)	9,317 (89.6)	9,674 (3.8)	12,709 (31.4)
설탕 (HS1701)	3,924 (12.1)	3,188 (-18.8)	469 (-85.3)	2,809 (499.3)	6,933 (146.8)	2,428 (-65.0)	3,441 (41.7)
글루탐산나트륨 (HS2922.42)	2,942 (281.1)	1,254 (-57.4)	317 (-74.7)	1,845 (481.5)	1,859 (0.8)	2,078 (11.8)	2,241 (7.8)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KITA(http://www.kita.net/, 검색일: 2026. 1. 23)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새로운 경제계획,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장기 전략의 일관된 추진이라기보다 연쇄적으로 발생한 외생적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 기조가 단계적으로 조정된 결과에 가깝다. 특히 팬데믹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국경봉쇄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거나 대비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으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제정책이 방어적·관리 중심으로 전환된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승호(2025)가 정리한 바와 같이 제8기 전원회의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와 조정 과정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8기 초반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제약 속에서 출발했다. 강화된 대북제재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대외적 출구 전략의 여지가 축소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과 국경봉쇄는 대외 교역과 내부 유통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1년에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기조로 한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고,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었다. 제8기 중반에는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정책 기조가 위기관리와 안정유지에 집중되었으며, '새시대 농촌강령'과 '12개 중요고지' 제시를 통해 정책 관리 방식이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국경봉쇄 해제 이후인 2023년부터는 정책의 초점이 회복 국면으로 이동했고, 생산 공백을 보완하는 데 역량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면, 5개년 계획은 제약된 환경 속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조정해 온 결과이며,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2026년 이후 북한경제의 경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표 7〉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제8기 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대내외 환경 변화	전원회의 논의 결과(경제정책)
제8기 초반	- 2017년 경제제재 심화 -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 - 2020년 팬데믹 확산, 북중 국경 봉쇄	- 1차(21.01): 5개년 계획 발표(자력갱생, 자급자족) - 2차(21.02): 중앙집권적 경제 통제 강화
제8기 중반	- 2021년 팬데믹 장기화 - 2022년 코로나19 종식 선언 - 2023년 북중국경 봉쇄 해제	- 3차(21.06): 비상방역대책 - 4차(21.12): 새시대 농촌강령 발표 - 5차(22.06): 비상방역대책 - 6차(22.12): 성과지표를 축소하여 '12개 중요고지' 제시 - 9차(23.12): '12개 중요고지' 초과달성 발표
제8기 후반	- 2023년 적대적 대남정책 전환 - 2024년 북러정상회담, 군사 파병 - 2025년 북러 밀착 심화	- 11차(24.12): 지방발전 정책 추진 강조 - 12차(25.06): 9차 당대회 소집 의결 - 13차(25.12): 5개년 계획 완수 선언

자료: 정승호(2025), p.4.

제9차 당대회에서 발표될 새로운 경제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하지만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최근 북한 당국의 정책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차기 경제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지난 5개년 계획(2021~25년)은 북한 스스로도 '정비·보강'을 핵심 기조로 설정한 과도기적 성격의 계획이었으며, 대내외 충격 속에서 기존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계획에서는 정비·보강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계획, 즉 생산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기존 계획이 '기반 다지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차기 계획은 그 기반 위에서 일정 수준의 양적 성과를 추구하는 국면으로의 복귀를 의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에서는 금속, 화학, 기계공업을 핵심 축으로 삼아 단계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도모하는 구상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계획 기간 동안 완결되지 못한 대형 설비투자 사업, 예컨대 탄소하나화학공업 관련 공정과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한편,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생산 확대를 추구하는 방향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20]

한편, 이러한 물적 생산 기반 강화와 병행하여 과학기술 중시, 정보화 추진 등 이른바 '지식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김정은 시대의 핵심 기조 역시 차기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산업 현대화와 생산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명시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IT 부품 및 관련 기술 도입을 확대해 경제 및 산업 전반의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포착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새로운 경제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이면서도, 내용 측면에서는 과거의 '5개년 전략'에 보다 가까운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즉, 정비보강을 통해 마련된 최소한의 기반 위에서 이전보다 다소 과감하고 포괄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5개년 계획과는 '목표의 연속성'을, 5개년 전략과는 '방향의 유사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어디까지나 제9차 당대회 이전의 제한된 정보에 근거한 신중한 추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계획의 내용을 확인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0) 이석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산업부문 평가와 전망」, 2025년 하반기 북한경제 모니터링 그룹, KDI 세미나, 2025. 11. 28.

Ⅳ. 결론

2025년은 북한경제에 있어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해였다. 2023~24년에 나타난 회복 흐름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지속성을 보일지 가늠하는 분기점이었으며, 동시에 제8기 5개년 계획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2025년 북한경제의 특이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2026년 북한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 이제 서두에서 제기했던 질문들로 다시 돌아가 보자. 본고를 시작하면서 최근 북한경제의 개선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고, 이를 추세적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5개년 계획 및 2025년의 성과가 2026년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고자 했다.

본고에서는 최근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회복 조짐은 전면적이고 균질한 개선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통제·동원할 수 있는 공식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난 제한적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성과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개년 전략(2016~20년)과 이번 5개년 계획(2021~25년)을 비교해봤다. 전략(2016년) 및 계획(2021년)의 출발 시점을 100으로 설정했을 경우 종료 시점의 경제 수준은 각각 88.6과 약 109.9(2025년 성장률을 3% 내외로 가정)로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차이를 넘어 북한 당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3~24년을 전후하여 산업과 농업 부문에서 나타난 성과는 이러한 체감의 차이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1~22년의 침체 국면에서 북한 당국은 12개 중요고지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으며, 이는 기저 효과, 북러 경제협력 확대, 자원 동원의 집중 등과 맞물리며 2023~24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실적을 창출했다. 압연강재 생산이 2023년 목표 대비 46% 증가하고, 유색금속 생산이 40% 확대되었으며, 전기아연을 생산하는 단천제련소가 3년 연속 북한이 선정한 10대 기업에 포함된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2025년 농업생산도 최근 10년 동안의 최대 실적인 490만톤이 예상된다. 5개년 전략이 끝나는 시점인 2020년의 농업생산이 440만톤에 불과했으니 매우 다른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결국 농업 측면에서도 위에 언급된 체감의 차이가 존재했다.

2024년 국가예산 수입 실적 역시 이러한 회복 흐름을 보완적으로 뒷받침한다. 예산수입 증가 계획은 당초 2.7%였으나, 발표된 실적은 4.3%로 이를 상회했다. 봉쇄 기간에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거의 없고, 봉쇄 이전 기간에는 실적이 항상 계획을 웃돌았는데, 2024년 사례는 예산 수입 패턴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 북한경제 전체가 점진적인 정상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회복이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최소한 공식부문을 중심으로 관리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2025년 북한경제의 특이성은 이러한 회복이 '확장 국면'이 아니라 '관리 국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북한 당국은 2025년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을 2.0%로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4년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25년에는 12개 중요고지에 대한 성과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2023~24년 동안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성과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무리수를 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21)]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5년 들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3대 필수 건설 대상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전은 해당 정책이 단순한 구호 차원을 넘어 실제 집행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공업 공장의 가동률 제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22)] 다만, 이러한 가동이 지속가능한 생산 확대와 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원료 공급, 에너지 여건, 수요 기반 등 구조적 조건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단기간 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러 밀착의 심화는 2025년 북한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단순한 외화 획득이나 물자 조달을 넘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식부문 생산에 직접적인 활력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온기가 시장과 비공식부문, 가계 소득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26년 북한경제의 향방은 몇 가지 핵심 변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각과 국가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관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 양정법, 사회주의상업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통계체계 구축은 이러한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5개년 계획 종료 이후 차기 계획 준비 과정 역시 내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북한경제가 시장의 자율성

21) 물론 제9차 당대회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여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2) 2024년 경공업 부문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의 개선이 상당 부분 기저 효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확대보다는 국가 관리의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25년 북중무역은 중국이 제재의 틀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치에 근접한 균형점', 즉 2019년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이를 넘어서는 선택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선택은 북한경제 회복의 속도뿐 아니라 공식부문에서 시장과 민간 부문으로의 파급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2024년의 환율 급등이 물가로는 제한적으로 전이되었으나, 2025년에는 물가 상승으로의 파급 조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뇨리지 확보라는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만약 일정 임계점을 넘을 경우 물가 상승이 이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뇨리지를 넘어서는 물가 상승은 2026년 동안 북한 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제시될 새로운 경제계획은 이번 5개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목표의 연속성(완결성)'을 유지하는 한편, 생산 확대와 성장 지향적 요소를 포함한 과거 5개년 전략과는 '방향의 유사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한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최근 북한경제는 분명 코로나19 봉쇄와 강력한 통제 국면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은 체제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수반한 추세적 변화라기보다는 국가가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성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에 가깝다. 현재의 회복이 2026년 이후 지속가능한 경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2025년에 형성된 공식부문 중심의 성과를 얼마나 제도화하여 민간에 얼마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율·물가 안정과 대외 교역 구조의 개선을 통해 얼마나 파급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23)]

---

23) 본고는 각 부문에서 북한경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연중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부문별 점검과 해석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11월 28일 세미나와 2026년 1월 14일 좌담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밝힌다. 아울러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각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은 이어질 환율·물가(남진욱, 2026), 무역(최장호·최유정, 2026), 산업(이석기, 2026), 농업(김영훈, 2026)을 참고하라.

참고문헌

김영훈, 「2025/26년 북한의 식량·농업 주요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제28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6, pp.77~86.

남진욱, 「2025년 북한 시장 환율·물가 평가 및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8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6, pp.30~47.

농촌진흥청, 「올해 북한 식량작물 482만톤 생산, 전년대비 31만톤 증가」, 보도자료, 2023. 12. 15.

_____, 「올해 북한 식량작물 478만톤 생산, 전년대비 4만톤 감소」, 보도자료, 2024. 12. 19.

_____, 「올해 북한 식량작물 490만톤 생산, 전년대비 12만톤 증가」, 보도자료, 2025. 12. 23.

양문수, 「북한의 5개년 계획 평가」, 『KDB 북한개발』, 2025년 겨울호(통권 35호), 2025, pp.6~53.

이석기, 「2025년 북한 산업 평가와 2026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8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6, pp.62~76.

_____,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산업부문 평가 및 전망」, 2025년 하반기 북한경제 모니터링 그룹, KDI 세미나(2025. 11. 28), 2025.

이종규, 「북한경제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27권 1호, 2025, pp.3~31.

정승호,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통해 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정책 조정 과정」, 『Global NK: Zoom & Connect』, 동아시아연구소(EAI), 2025.

최은주, 「2025년 북한 경제 평가와 2026년 전망」, 『Sejong Focus』, 정세전망 2026 특집호 제3호, 2025.

최장호·최유정, 「2025년 북중·북러 무역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제28권 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6, pp.48~61.

최지영, 「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4-68, 2024.

홍제환·최지영·정은이·정은미·조정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21-02, 2021.

한국은행, 「2023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24. 7. 26.
_____, 「202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도자료, 2025. 8. 29.

〈웹사이트〉

『AsiaPress』(https://www.asiapress.org/korean/, 접속일: 2026. 1. 20).
『DailyNK』(https://www.dailynk.com/, 접속일: 2026. 1. 20).
ECOS(https://ecos.bok.or.kr/, 접속일: 2026. 1. 20).
KITA(https://www.kita.net/, 접속일: 2026. 1. 23).
『연합뉴스』, 2026. 1. 22.
『Voice of Korea』, 「경제전반에 활력을 더해 준 2025년」, 2025. 12. 29.

『노동신문』, 「경제사업에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철저히 확립하자」, 2020. 1. 24.
_____,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경영관리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을 10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2023. 10. 2.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_____,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 김책제철련압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8월에 많은 아연강재를 증산한 데 이어 9월에도 높은 실적을 기록」, 2024. 9. 19.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2025. 1. 24.
_____, 「북방의 철의 기지가 증산의 열기로 세차게 끓는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 후 압연강재 생산에서 최고 실적 기록」, 2025. 10. 5.